

한국산업조직학회·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바람직한 대기업정책의 모색」 세미나 개최

(사)한국산업조직학회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은 지난 10월 12일(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바람직한 대기업정책의 모색」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서 양영식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방식에 대한 쟁점과 정책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방식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범위의 척도기준에 해당하여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논의의 일환이라는 성격을 갖는다고 언급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1차적 목표를 적정한 재무자원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경영부실을 방지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출자는 실물투자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출자총액제한이 곧 기업투자 위축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신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방식은 자산총액에 준거하여 20~24위 계층과 25~30위 계층의 경계인 4조원 내외의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력집중억제제도는 현재와 같은 사전적인 총량규제방식이 아닌 선별적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경쟁정책적 접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범위는 5~10개 내로 감축하고 출자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현재 공정위 재벌규제의 실질적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상징적 조항의 성격이 강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공정거래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신광식 고문은 첫째, 새로운 경제환경하에서 생산자 위주의 산업정책적 발상을 극복하고 소비자 위주의 경쟁정책 본연의 기본이념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력집중완화와 거래의 공정화라는 목적은 경제효율 내지 소비자후생증진이라는 목적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고, 둘째,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등 총량적 규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계열구조의 형성·강화는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기업결합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효율성 제고효과가 없는 기업결합(계열확대)을 억제하여야 독점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신 고문은 공정위의 법 집행 능력을 보완하고 공정거래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사소(私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김준기 연세대 교수는 공정거

래정책의 방향이 경제효율과 소비자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하고, 관계회사에 투자유인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영권 유지의 수단으로 비경제적인 출자를 하는 것이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의 문제점인 만큼, 이사들이 자기가 속한 개별기업의 주주 이익을 위해 충실의무를 이행하도록 대기업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이규억 아주대 교수는 기업의 다각화가 무조건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며, 소수주주권한 강화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대기업정책은 구체적 타당성과 보편성을 조화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국현 유한킴벌리 대표이사는 현 경제상황이 경기부양을 필요로 한다고 할지라도 수익성이 낮고 위험도가 큰 투자는 규제되어야 하며, 대다수 대기업의 인력·의사결정체제가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이므로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조학국 공정위 사무처장은 경제력집중억제제도, 소비자피해보상제도 등은 국민과 시장의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약자 보호시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의 재벌구조는 계열회사가 얽혀 있어 계열분리명령제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배주주의 잘못으로 인해 국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예방적 규제는 필요하고, 지배주주가 순환출자로 내부지분을 높이는 현재의 기업지배구조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원고모집

본 협회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분위기 조성
과 공정거래제도의 정착을 위해 발간
하는 월간「공정경쟁」은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들의 참신하고 의욕적인 글을 모
집합니다. 논단과 기고문은 물론 수필,
소설, 풍토, 만화 등 소재를 불문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주소 : (100-74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의회관 621호

사단법인 한국공정거래협회 「공정경쟁」출판담당자 앞

전화 : (02)775-8870~2

E-mail : kfca2000@netsgo.com

PC통신 : kfca2000(천리안)